

오늘의 주요기사

2022 11 9

새로운 강원도!
특별 자치시대!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03				1					
江原日報	21		2023		2					
 연합뉴스			"	"	3					
강원도민일보	03		"	4				
江原日報	03		"	.	5,765	...	5			
江原日報	03			道		6				
江原日報	03		"	"	道	...	7			
 강원신문 <small>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small>				,		...	8			
江原日報	23						9			
 춘천MBC				,	"	FC	"	10		
G1방송					FC		'	'	11	
 연합뉴스					FC		..."	...	12	
 연합뉴스					FC		..."	...	13	
 강원신문 <small>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small>							,		...	14
강원도민일보	02			"			"		15	
 KBS 춘천							16
강원도민일보	04			"					...	17
강원도민일보	02						18
江原日報	03								...	19
江原日報	01		3			中企				20
江原日報	01				100%					21
강원도민일보	01						'	'		22
江原日報	20			"		"			...	23
강원도민일보	21		[]	2						24
강원도민일보	21		[]			,				25
江原日報	19		[]			,			...	26
江原日報	19		[]			,			...	27



도의회 수험생 수능대박 기원 2023학년도 수능시험을 앞두고 권혁열 도의장과 의원들이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작성 후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영

江原日報

2022 11 09 ()

21



◇강원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박승선기자

도의회 2023학년도 수능 수험생 격려

강원도의회가 오는 17일 실시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권혁열 도의장을 비롯해 49명의 도의원은 8일 세미나실에서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를 가졌다. 의원들은 ‘힘내자! 좋은 결과 기다리고 있다구!’, ‘잘 띄어라!’, ‘꼭꼭 짚고

술술! 풀자’, ‘무조건 수능대박!’, ‘원하는 대(大)로 가자’, ‘수고했어, 다 잘될 거야’ 등 다양한 응원메시지를 작성해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그동안 수험생들이 기울인 노력과 수고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수험생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김지원기자 ji1@

강원도의회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춘천=연합뉴스)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수험생 격려·응원 행사가 열려 강원도의원들이 다양한 응원 메시지로 수능 대박을 기원하고 있다. 2022.11.8 [강원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강원도민일보

2022 11 09 ()
03

도의회 “회생신청 이후 투자·하청업체 보호장치 필요”

도 기조실 행정사무감사서 당부
“중도개발공사발 피해파악 시급”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도 도마

강원도의회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법원 회생신청과 관련, 추후 강원도를 믿고 투자한 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8일 강원도기

획 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GJC)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GJC나 BNK투자증권과 상의해서(기반공사) 하청업체라든지, (레고랜드 주변) 부지 매입업체라든지 이들 보호장치를 만들어놓고 했으면 좋을 것”이라며“(2050억원) 부채를 피하기 위해서 회생신청을 한다고 터뜨려버리니, 부지를 매수했던 사람들, 하청업체 사람들이 줄도산하게 생겼다. 피해업체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산업

국에서 파악하고 있다”며 “대응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미시령동서 광릉도로 손실보전금 문제와 관련, 기조실장에게 “자연이자가 발생하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 이날 김기조실장은 앞서 “손실보전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도 보건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표 강원FC 대

표이사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과 관련, “지사와 사이 안 좋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전용구장 이런 문제 때문에 안 맞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우영석 도 보건체육국장은 “일부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았다”라고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김 의원은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 도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분을 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지광천(평창) 의원은 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경우 해당 시·군에 입주한 농공단지 직접생산 제품을 우선 구입해 농공단지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원제용(원주) 의원은 도 보건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태권도 실업팀이 도체육회로부터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사유가 전국체육대회 참가체급 중복이 예상된다는 것”이라며 “억울한 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설화 lofi@kado.net

2022 11 09 ()
03

江原日報

“레고랜드·미시령터널 우발채무 5,765억 대책 시급”

도의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감서 “예측 실패” 질타
“국내 최다 출자·출연기관 보유 이 중 40% 적자” 지적

강원도의회에서 우발채무(장래 일정한 조건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채무)가 5,8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실질채무(8,129억원)의 70%에 달해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승순(국민의힘·강릉) 의원은 8일 도의회 제315회 정례회 도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레고랜드 보충채무 2,050억원과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손실보전금 등 2개 사업으로 인한 우발채무 규모만 5,765억원”이라며 “이 중 미시령터널

의 총 사업비 2,580억원 가운데 민자사업이 투자된 금액은 964억원으로 40%가 안 된다. 또 2036년까지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도비 4,1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이유 등을 따졌다.

이에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초 미시령터널을 건설할 때에는 고속도로나 철도 등 장기적인 공급을 예측하지 않았고 미시령터널의 수입이 급감할 것이라는 부분도 사실은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최승순 의원 ◇임미선 의원 ◇지광천 의원 ◇박관희 의원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021년도 미시령 손실분을 내년도 2월 말까지 납입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에 따른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출자·출연기관을 보유한 강원도의 경영 실적 부진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임미선(국민의힘·비례) 의원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2019년 290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으로 늘었다”며 “해당 기관의 40% 상당은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의 예산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영평가만으로 관리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농공단지 생산제

품 우선 구입을 요청하는 의견이 나왔다. 지광천(국민의힘·평창) 의원은 “도에서 발주하는 각종 물품 구입 시 해당 시·군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입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도장애인체육회 소관 행감을 실시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박관희(국민의힘·춘천) 의원은 “올해 장애 청소년 하계 캠프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성을 띤 단체 행사에서 1건의 불상사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제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지원기자



도의회 경제산업위 道 해외본부 점검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는 8일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강원도 해외본부(일본·베트남)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했다.

江原日報

2022 11 09 ()

03

“수출기업 활로 모색 큰 역할”

도의회 道해외본부 화상점검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김기철)가 강원도 해외본부(일본·베트남)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했다. 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8일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당초 현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점을 고려해 전격 취소했다. 김기철 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 도내 수출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강원도의의회 경산위, 강원도 해외본부 온라인점검 나서

박수현 선임기자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보고 및 현황 점검
강원도 일본, 베트남 해외본부 현지감사 해외출장 취소
온라인 화상회의 해외본부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전략 논의
어려운 경기여건 극복 도내 수출기업 지원 주도적인 역할 강조



강원도의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강원도 해외본부 현지감사를 대체하여 8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점검을 실시했다.

강원도의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기철)에서는 이태원 압사 참사 애도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강원도 해외본부 현지감사를 대체하여 8일,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점검을 실시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당초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본 본부와 베트남 본부 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기로 하였으나, 지난주 해외 방문일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일본, 베트남 본부 개소 이후 한 번도 의의회 차원의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코로나19로 축소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어, 8일 오후 2시에 위원회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본부별 업무보고를 받고,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기철 강원도의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이번 온라인 화상점검을 통해 일본, 베트남 등 최근 해외시장 현황을 파악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최근 어려운 경기여건 속에 도내 수출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해 해외 본부의 좀 더 빠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박수현 선임기자 gwnews@hanmail.net

이영표 대표 재계약 불발 반발 확산

강원FC 나르샤도 항의방문
도의회서도 질타 이어져

속보=신임 강원FC 대표이사
로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유력(본보 8일자 23면 보도)
하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영표 대표이사 재계약 불발에
따른 잡음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원FC 서포터즈 '나르샤'
의 전인표 회장은 8일 오전 이영
표 대표의 재계약을 촉구하며 강
원도청을 항의 방문했다. 도청
체육과에 팬 1,004명의 서명이
담긴 '이영표 대표 재신임 온라
인 청원 동의서'를 전달했다.

전 회장은 "강원FC는 도민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다. 김진
태 도지사께서 구단주로서 많은
역량을 갖고 계시지만 이번 만큼
은 도민이 원하는 대로 진행해줬
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신임
대표이사로 유력한 김병지 대한
축구협회 부회장에 대해서는 "일
을 못하실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
만 이 대표가 워낙 잘해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도의회의 도청

보건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이 대표 재계약 무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김시성(국민의
힘·속초) 의원은 "이 대표가 강
원FC의 자존심을 높였는데 김진
태 지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바꾸
는 것 아니냐"며 "인사는 도지사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되면 책임
을 져야 한다. 내년에 성적이 떨
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다시 한번 재
고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고 강조했다.

우영석 도 보건체육국장은
"이 대표의 능력은 잘 알고 있지
만 이 대표도 도를 위해 또 다른
곳에 가서 역량을 펼쳐야 한다"
면서 "강원FC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약해야 한다. 내년에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당초 이날 새로운
대표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관련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며 연기했다. 오는 11일 이 대표
의 재계약 불발과 관련한 강원
FC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사회 개최 후 새로운 대표가 선
임될 전망이다. 권순찬기자

춘천MBC

2022 11 08 ()

김시성 의원, "이영표 강원FC 대표 교체 재고해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영표 강원FC 대표 교체를 질타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시성 의원은 강원도가 이영표 대표를 교체하려는 이유가 축구 전용 구장 건립 문제 등으로 현 도정과 뜻이 안 맞기 때문 아니냐며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사는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도민들의 실망감을 누가 책임질 거냐며 이영표 강원FC 대표 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G1방송

이영표 강원FC 재계약 불발 논란 '확산'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앵커]

강원도가 연말로 2년 임기가 끝나는 이영표 강원FC 대표와 재계약을 안 하기로 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물론 도의회에서도 이 대표 재계약 문제가 논란이 된 가운데, 강원도는 새 대표를 곧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강원FC 서포터즈 회장이 강원도를 찾아,

재계약이 무산된 강원FC 이영표 대표의 연임을 촉구했습니다.

"(똑똑) 도지사님. 이영표 대표 (재신임) 온라인 서명 가져왔습니다"

서포터즈는 1,004명의 명부와 온라인 성명서를 강원도에 전달했습니다.

팬들은 강원FC가 올해 상위 스플릿에 진출하는 등 좋은 성적을 냈고,

이 대표가 스폰서 유치와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도지사님이 구단주로서 많은 영향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 강원FC 만큼은 개인의 사리욕보다 팬들의 원하는, 강원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그런 공과도 있는데, 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이 안 됐다는 그런 거는 유감이고.."

강원도가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풀고 있다며,

축구전용구장 건립과 관련해 강원도와 이 대표 간 이견이 문제였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용구장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고, 춘천에 하나 강릉에 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사하고 집행부하고 안 맞아가지고 강원FC 이영표 대표 지금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원도는 전용구장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경험을 갖춘 대표가 부임하면 더 잘 이끌 수 있고,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강원FC 신임 대표로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을 유력 후보로 지목하고, 곧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이영표 강원FC 대표 재계약 불발... "스포츠는 정치로 풀면 안 돼"

김시성 강원도의원 "김진태 지사와 사이 나쁘다고 바꾸냐" 질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출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영표(45) 프로축구 K리그1 강원FC 대표이사의 재계약 불발 사태와 관련해 스포츠를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시성(속초2) 도의원은 8일 강원도 보건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스포츠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 축구인들을 하나로 묶고 도민들과 소통을 잘해서 자존심을 높였는데 김진태 강원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바꾸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전용구장 건립 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교체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지적하며 "도민들이 다 좋아하는 대표이사를 왜 바꾸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2020 2022년 3년간 입장료 수익이 3배 정도 늘었고, 광고 수익도 엄청나게 늘었다"며 "더 높은 성적을 위해서 사람을 바꾸는 건 성적이 나쁠 때 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책임져야 한다"며 "성적이 올해보다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고, 도민들의 실망감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다시 한번 재고해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30일 최문순 지사 환영받는 이영표 강원FC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강원도는 이영표 대표이사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멤버인 이 대표이사는 행정가로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강원이 강등 위기에 몰린 2021시즌 '삼고초려' 끝에 최용수 감독을 영입했고, 최 감독은 승강 플레이오프(PO) 승리로 팀의 1부리그 잔류를 이끌었다.

이 대표이사와 최 감독이 합을 맞춘 강원은 2022시즌 K리그1에서 구단 역대 최고 성적 타이인 6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스폰서 유치와 각종 상품화 사업, 사회 공헌 등에서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지사가 당선되면서 이 대표이사의 재계약이 불발된 데는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강원FC 이사인 홍석표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일 이사회 소집을 구단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태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재계약과 관련한 물음에 "물러나는 분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례다. 계약 만료로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은 걸 잘 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애초 이날 신임 강원FC 대표이사 발표하기로 했으나 관련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연기하고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conanys@yna.co.kr

박영서(conanys@yna.co.kr)

강원도의회 농수산위,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점검 나서

박수현 선임기자

농가부담 덜어주기 위해 면세유 지원 금액 확대해야



강원도의회 전경.

농업인의 유류사용과 관련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급되는 면세유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의 신고, 공급기준, 배정방법,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에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농협(중앙회, 지역)과 지자체 그리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 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강원도는 2018년 이후로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강원도가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시·군을 통해 면세유 판매업소 395개소를 점검한 것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번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고 지역농협은 면세유 공급·판매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강정호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법 집행을 최우선 시 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해 면세유 가격 또한 올라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세유 지원확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원도내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면세유 1리터당 100원(도 30, 시군 70)을 지원하고 있다.

미니설명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2조제4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면세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부정유통, 표시적정성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농업인 등 및 면세유류관리기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점검결과 부당사례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 및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박수현 선임기자 gwnews@hanmail.net

강원도민일보

2022 11 09 ()
02

도 “도청사 이전 미선정 지역 청사진 함께 제시”

춘천 지역 내 도청사 신축이전부지 논의가 본격화되며 후보 부지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선 지역발전 청사진을 같이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수도기획조정실장은 8일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실시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청사 재논의가 어떤 이유에서 된 건지 알지 않느냐.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지켜달라”는 임미선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어차피 최종 선정되는 곳은 한 곳”이라며 “강하게 유치의사를 밝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청사 이전과 상응하는 수준이라는 건 어렵겠지만, 지역발전 청사진을 같이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청사만이 지역개발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춘천 전체, 강원도 전체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신청사 이전 여론조사와 관련해 ‘도민 여론이 제대로 반영된 걸로 보여지느냐’는 질의에는 “공식적인 리서치기

관을 통해 수행했다”며 “저희가 예상했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본다”고 했다. ‘위원들 간 부지선정 점수격차는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규제에 묶인 춘천 역점 사업...강원특별자치도 법에 기대



[앵커]

춘천시의 역점 사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법으로 규제를 풀거나 특례 조항을 집어넣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강원도와 협력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육동한 춘천시장이 지역경제에 힘을 불어넣기 위해 내놓은 첨단지식산업 육성책.

그 기반이 되는 핵심 전략이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 지정입니다.

하지만 이공계 대학 3개, 정부 투자기관 3개, 연구기관 40개가 있어야 되는 특구 지정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유원지에 설치 가능한 대관람차도 주거지역인 근화동에는 들어설 수 없습니다.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 신소재개발 사업은 마약류 관리법에 저촉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체류 연장 사업은 출입국 관리법에 저촉됩니다.

각종 규제로 발이 묶인 춘천시는 강원도가 개정을 추진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례 조항이나 도지사 위임 사무 등의 방식으로 규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핵심특례로 16건이 선정됐습니다.

[최찬우/춘천시 역점시책추진단장 : "강원도와 협력을 통해서 핵심특례의 논리를 개발하고 법제화하여 제출된 특례안이 강원도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18개 시군에서 440여 개의 특례 지정 요청을 받은 강원도는 이달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추가할 법규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 부처별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법안에 담아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의원 입법 발의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강원도로 권한을 대폭 가져오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용식/강원도 특별자치국장 : "강원도가 필요한 만큼 그런 권한을 받을 만큼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 논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 특별자치도법에 각종 규제를 풀어낼 해결책이 얼마나 담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재경

강원도민일보

2022 11 09 ()
04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세입분권 강화 규정 포함 필요”

황규선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보고서
지방재정 구조적 문제 조치 필요 강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개막과 연계해
‘강원도형 재정혁신’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지역 스스로 미래를 계획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확보
는 물론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에 새로운 세입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
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 황규선 연
구위원은 8일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필
요하다’ 보고서(정책특독 제07호)를
통해 강원도 재정혁신과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채무 제로가 달성될 시점
에 또 다시 채무 감축 계획이 발표되는
등 채무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세입 기반 취약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가
중 및 경직적인 세출 구조를 가진 강원도
재정이 처한 현실이다. 지방재정에 내
재된 구조적인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사업 실명제 확
대 △예산 실명제 도입 △재정 건전성
확보·유지를 강제하는 PAYGO 제도
및 재정준칙 도입 등 지출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지방소비
세와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 공동세
방식의 새로운 세목 설치 등 세입 기반
확충과 함께 지역 스스로 미래를 계획·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 확보, 강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세입분권 강화
등 새로운 세입 관련 규정 포함이 필요
한 것으로 진단됐다.

박지은 pje@kado.net

2022 11 09 ()
02

강원도민일보

도 레고랜드 사태 수습 총력... 도정 현안 조기해결책 강구

포털 내용수정 요구 '정면 돌파'
김 지사 사실관계 바로잡기 나서
국·과장 회의소집 계획도

강원도가 레고랜드발(發) 금융시장 쇼크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증채무 2050억원 연내 상환(12월 15일까지) 계획 발표 이후, 채권단의 소송 보류 등 레고랜드 쇼크 사태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면서 도는 '레고랜드' 이슈에 빨려 들었던 도정 현안을 가다듬고 있다.

레고랜드 쇼크 사태가 정치권 정쟁으로까지 번지자 도는 사실관계가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강원도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도는 한 대형포털의 지식백과 수정을 최근 요구했다. 도는 해당 포털에 게재된 '레고랜드 사태'와 관련한 설명이 사실관계가 달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포털의 사전에선 레고랜드 사태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22년 9월 28일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프로

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급보증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촉발된 사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지급보증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녹취록 등을 근거 자료로 제출하고, 수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회생신청을 준비 중이다.

레고랜드 쇼크 사태는 민선 8기 김진태 도정 출범 이후, 휘발성이 가장 큰 사안으로 도정의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시험된 현안이기도 했다. 채권·금융시장은 물론 정치권으로까지 해당 이슈가 회자되면서 김 지사는 정부·여당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세부 내용 등을 직접 알리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도는 이번 사태로 인해 국비확보를 비롯한 도 현안 조기 해결에 차질이 없도록 내부 기강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국·과장 회의소집을 계획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레고랜드 쇼크 사태로 도정에 적지 않은 논란이 제기됐지만, 사실관계 왜곡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환

江原日報

2022 11 09 ()

03

여야 강대강 대치 속 예산 심사 강원 국회의원들 공조 ‘빨간불’

내일 道-의원 간담회 주목

속보=‘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로 인한 여야 공방(본보 지난 3·4일자 2면, 8일자 3면 보도)이 확산되면서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예산 정국에 접어들면서 강원 정치권의 협치가 필요한 시기지만 ‘레고랜드 사태’로 분열되면서 강대 강대치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현재 강원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758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17개 주요사업 1,945억원의 추가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도 국회의원들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공조를 기대하

기엔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여야 중앙당은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연일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책임론에 대해 지난 7일 “보증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맞섰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경제위기는 레고랜드가 아닌 지난 5년간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이라고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김진태 지사를 향해 “무책임하다”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 가운데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김진태발(發)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진태 도정과 맞부딪치고 있다.

이에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강원도-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예산정책 간담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 현안이 여야 갈등의 뇌관이 된 데다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강원권 여야 의원들이 맞서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산 확보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진태 지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갈등이 있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힘을 합칠 땐 합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2 11 09 ()
01

3개월새 이자 두배 中企 줄도산 위기

중소 대출금리 '4.87%' 9년만에 최고... 7% 고금리 속출
기업들 "추가 이자 부담 역대" 24일 빅스텝 예상 대비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원도 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불과 2~3개월 사이 이율이 두 배가량 뛰자 강원도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흘러나오고 있고 가계 대출 금리까지 치솟으면서 일각에서는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올 7월 신공장 착공에 나선 춘천 A중소기업은 불과 3개월 사이 금리가 두 배가량 뛰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당시 2.8%였던 대출금리가 이달 들어 7%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A중소기업 대표는 "현재 대출 규모가 30억원이고 본공사에 들어가면 40억원이 넘게 되는데 불과 몇 달 사이 연간 추가 이자 부담액이 역대를 넘어선다"면서 "금리 인상이 답이 아닌데 이러다 중소기업이 다 죽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병원 건물을 증축한 B병원 원장도 고금리의 대표적인 피해자다. 지난달 대출 연장을 했는데 기존 3% 후반이던 이율이 7%대로 치솟은 것.

B병원 원장은 "문제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대출을 받은 기업

과 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9월 예금은 행 신규 취급액 기준 국내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7%로 2014년 1월(4.88%) 이후 8년8개월 만에 최고다.

특히 지난 6월 0.27포인트, 7월 0.30%포인트, 8월 0.29%포인트 등 3개월간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오는 24일 다시 한번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내 기업들의 대출 규모 축소와 자금 경색 우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가계 대출 규모 역시 지난 6월 184억원, 7월 -1,205억원, 8월

101억원 등으로 감소세가 확인, 일각에서는 자금 경색에 대한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모헤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은 "당장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시설 자금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

江原日報

2022 11 09 ()
01

접경지 군납 100% 수의계약 관철될까 주목

김지사 11일 국방장관 면담
경쟁입찰방식 전환 저지 총력

속보=접경지 농축산물 군납 경쟁입찰 전환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강원도·접경지역 간 대립(분보 10월 24일자 16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찾는다.

국방부와 접경지역의 의견이 좁혀

지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자 톱다운(Top-Down·하향식) 방식의 답관을 통한 출구 모색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지사와 이 장관은 이르면 오는 11일 국방부 청사에서 군납제도에 대한 면담을 나눌 예정이다.

국방부는 현재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는 군부대 지역농산물 군납에 대해 2025년부터는 전면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여러

차례 불거진 급식부실 논란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

반면 도내 접경지역 농민들은 대기업의 군납시장 진출로 인한 지역 농가 피해, 저가경쟁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접경지역의 강한 반발에 국방부는 '수의계약 70% 3년 유예방안'을 제시하며 한 발 물러났으나 여전히 '임시방편'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 목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역시 현행대로 100% 수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접경지역 군납 조달 지역우선제 유지는 김 지사의 핵심공약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의 면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며 군납제도에 대한 지역의 입장을 전달하고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2022 11 09 ()
01

강원도민일보

춘천 수열 융복합클러스터 토지보상에 ‘발목’

**동면 지내리 일원 519필지 보상
현재 진행 30% 수준 지지부진
교통영향평가 진입로 보완 요청
내년 3월 착공 계획 지연 불가피**

속보=춘천 동면에 들어서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분지 8월 4일자 2면 등)과 관련 토지보상 진행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공사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진행된 강원도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클러스터 접근로에 대해 교통편의를 확보하라는 보완 요청이 내려지면서 접근로 확보 역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분지 취재 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보상대상인 토지 519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보상 감정 평가를 거쳐 지난 6월부터 보상금액과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유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와 춘천시에 따르면 이날까지 계약이 체결된 필지는 150필지에 불과하다. 전체 필지 중 29%만 등기 이전이 완료된 셈이다. 보상액 기준으로는 전체 보상액 952억원 중 286억원(30.0%)에 그치고 있다.

보상협의 속도가 더뎠지면서 사업자 측인 수자원공사의 수용재결이 불가피하지만 보상협약이 50% 이상 진행돼야 수용재결 절차에 돌입할 수 있어 보상액 지급 완료까지 요원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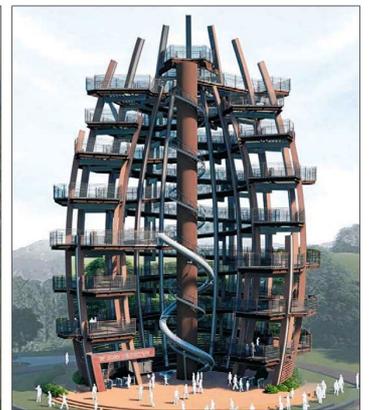
여기에 당장 새로운 접근로도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강원도는 최근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진입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새로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보완을 요청했다. 춘천시는 동면 춘천장례식장 삼거리 인근 1.2km 구간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접속도로 개선을 추진했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또 다른 진입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는 동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도로를 확장하거나 양구방향 46번 국도에 IC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면서 관계부서와 도로기본계획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춘천장례식장 삼거리 인근서 발견된 맹꽂이 또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의 관심 사안이다. 춘천시는 지난 8월 맹꽂이 서식을 확인한 이후 보존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원주환경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청에서 보존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보완을 요청한 상태다. 춘천시 관계자는 “착공 전 인허가나 행정절차 단계가 남아 있다 보니 로드맵상 착공 일정을 맞추기는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동면 지내리 일원에 조성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사업면적은 81만㎡로 2027년까지 사업비 3040억원을 들여 소양강댐 심층냉수를 활용해 친환경 데이터 집적단지 및 스마트팜 등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송은

“내년 5월에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보려오세요.” 강원도는 내년 5월4일부터 6월6
일까지 34일간 ‘주행사장인 고성 세계잡버리수련장과 부행사장인 속초, 인제, 양
양 일원에서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주제로 ‘2023 강원세계산림
엑스포’를 개최한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산림의 역사, 문화, 생태, 환경 등 산
림 전반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산림 분야 엑
스포로, 2019년 4월 개최 계획을 확정했고,
2020년 11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았다. 당초 지난해 개최
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1년 연기됐다. 강원도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 강원도서 세계 최초로 열려



◀내년 5월4일부터 6월6일까지 34일간 열리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주행사장 조감도(왼쪽 사진). 강원세계산림엑스포의 랜드마크인 숲방울전망대. 전망대에 오르면 동해바다와 설악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제대로 즐기= 산림을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행사, 학술행 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하게 마련된다. 잔디광장과 나무, 꽃 정원, 숲방울전망대 등 풍성한 볼거리도 준비될 예정이다. 산림엑스포 공식 음식관과 푸드트럭 등을 통해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다. 내년 5월 따뜻한 봄날 가족, 연인, 친구, 동료들과 함께 세계 산림엑스포 행사장을 찾으면 역대급 인생 샷과 추억을 쌓을 수 있다.

◊전시관: 전시관은 총 5개로 구성돼 있다. 푸른지구관과 산림평화관, 문화유산관, 휴양치유관, 산림교류관이다. 푸른지구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유일한 해답인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비전을 담은 환상적인 미디어아트가 벽면과 바닥 4면에 펼쳐질 예정이다. 산림평화관에서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며 황폐화된 산림의 복원 과정, 평화와 공존의 숲 DMZ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화유산관에서는 숲 관련 미디어아트 작품, 삽감디에 영상과 함께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들을 수 있다. 휴양치유관에서는 숲속 동물원과 공연, 동화, 캠프체험 등이 마련되며, 분재, 꽃, 곤충 전시와 나무그리기 체험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교류관에서는 청정인삼, 목재가공, 임산물미오, 스마트산림 등 산림 관련 여러 산업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야외전시장에는 각종 임업장비 전시되고 대형장비 시연 등 현장감 넘치는 체험이 펼쳐진다.

◊학술행사: 산림과 환경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학술행사가 행사기간 4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5월4일부터 이틀간 고성에서는 ‘아시아지역 산림보전 및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한 학술행사가 열리며, 5월17일부터 18일까지 속초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산림’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개최된다. 5월24일부터 이틀간 인제에서 ‘문화으로 바라보는 산림과 통일’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진행된다. 5월31일부터 이틀간 양양에서는 ‘강원특별자치시대 지속가능한 강원 산림 발전방안’을 주제로 학술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대행사 및 체험행사: 개막식과 폐막식 인기가수 축하공연을 비롯해 어린이날, 어버이날, 로즈데이 등에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상설무대와 전망대 야외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마임 등 상설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주행사장에서는 숲놀이체험, 산림라이브스튜디오, 목악기체험, 임산물 경매, 목공예체험, 숲속사진관, 산림해나&캐디커쳐 등이 상설 운영되고, 피톤치드 가득한 소나무 숲속 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다. 부행사장인 고성에서는 DMZ경

내년 5월4일~6월6일 34일간 열려 푸른지구·휴양치유 등 5개 전시관 국내외 전문가 산림 환경 학술행사 버스킹·클라이밍 등 즐길거리 풍성

회관부터와 함께 향로봉트레킹대회, 저도 어장 대문어축제가 진행된다. 속초 청초호 유원지 일원에서는 은은한 꽃향기와 화려한 조명 불빛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밤 풍경이 연출된다. 국립등산학교에서는 스포츠 클라이밍 체험과 동호인 경연대회가 열리고, 설악산자생식물원에서는 숲체험 걷기행사와 산림문화 백일장이 개최된다. 인제 용대관광단지 일원에서는 숲 해설 경연대회와 임산물 한마당 축제, 백담사 템플스테이가 열린다. 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에서는 가족 힐링 숲속 목공예 체험과 목공예 기술자 경연대회, 숲속음악회 및 숲속기차체험 등이 이어진다. 또 산림청 주관 산림레포츠 행사와 산림조합중앙회 주관 전국 시·도 산림조합원의 날 등도 운영된다.

◊전망대: 상징조형물과 숲 행사장 한쪽에는 높이 45m, 총길이 1.2km의 숲방울 전망대가 조성된다. 숲방울전망대는 숲방울과 씨앗을 모티브로 만든 산림엑스포 랜드마크로, 전망대 상층부에서는 설악산 울산비취를

비롯한 주요 봉우리와 동해바다, 속초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엑스포 메인게이트로 입장하면 잿나무 열매를 모티브로 한 높이 9m의 상징조형물을 만날 수 있으며, 주요 전시관과 광장, 꽃 정원 등에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카카오, 동서발전, KB생명보험, 적십자 등의 기업·기관들이 조립 및 복원을 위해 조성한 기업 참여숲을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지금까지 한 국수력원자력, 산림조합, NH농협, 한국자산기술협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진비즈온 등이 산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후원에 참여해 행사 준비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입장권은 어떻게 구매하나=입장권은 YES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NH농협은행과 조직위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구입 가능하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만 19-64세) 1만원, 청소년(만 13-18세) 7,000원, 어린이(만 7-12세)는 5,000원이며, 국가(독립)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보호자 1명, 만 75세 이상, 보호자 동반 만 7세 미만 아동 등은 무료 입장이다. 단체입장권과 강원도민, 강원도 소재 기업·단체와의 협약기관, 만 65세 이상 만 74세 이하, 현역군경 등은 요금이 할인된다. 현재 사전예매 기간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입장권 구매 및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 홈페이지(www.gwfe.or.kr), 공식SNS 채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과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왜 개최하나=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국내 전체 산림의 22%가 강원도에 위치해 있다. 또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 중 24개가 강원도에 있다. 강원도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산림을 꾸준히 복원하고 가꾸어 온 산림으로 비껴놓았다. 강원도는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를 통해 이처럼 소중한 산림과 인류의 바람직한 공존에 대해 알장서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 김동일 상임부위원장은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앞으로 산림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산림엑스포가 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와 산림의 바람직한 공존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감염병 및 화재, 강풍 등에 대응하는 안전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운영하겠다”며 “교육적 효과가 큰 체험행사와 이벤트, 공연 등이 다채롭게 마련되는 산림엑스포에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강원도의 깨끗한 산과 바다, 계곡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함께 즐기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은석기자**

강원도민일보

2022 11 09 ()
/ 21

제2도청사 실질 기능 조정있어야

-환동해본부지사 집무실 신설, 책임 뒤따른다

강릉 주문진에 소재한 강원도청 환동해본부에 지사와 부지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전용 집무실이 신설된다고 본지 11월 8일자에 보도했습니다. 김진태 지사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찾아가는 강원도청’을 이행하기 위한 본격 행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집무실이 설치됨으로써 현장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소통에 유리하긴 하지만, 월 1회 이상 방문이라는 가벼운 정도의 취지는 부족해 보입니다.

환동해본부에 집무공간까지 갖추고, 기능과 역할 배분이 따르지 않으면 낭비요소라는 등 걸치레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강원도내 일부 자치단체장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을 써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한달 중 불과 며칠을 쓰기 위해 비좁은 사무공간에서 확보한 것이라면 당장 도민 눈초리가 매서울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여·야 양측 모두 제2도청사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동해안 지역에서는 조속히 제2도청사가 실현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집무실 신설을 계기로 실현을 구체화하는 다양한 방안 제시가 잇따르며 지역 사회 욕구가 증폭할 수 있습니다. 내년

6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동해안권에서는 특화된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강릉·동해·태백·속초·삼척 5개 시단위 지역에서는 춘천, 원주에 비해 여러 방면에서 행·재정적인 차별에 대한 소외감이 적지 않습니다. 청정 바다와 긴 해변, 숲 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국·도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음으로써 글로벌 명소로 발전하지 못한 아쉬움이 큼니다. 관광인프라 미흡으로 여전히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관광산업에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물론 미흡한 첨단산업 발전에 대해 불만이 높습니다.

강원도청 실·국 상당수 부서를 옮겨올 것을 지적하며 별써 용지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2도청 승격 등을 예비하고 지역 발전 행·재정 수요를 제대로 감당해내는 역할로 전환하지 않으면 당장 무늬만 제2청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원주의 반발도 내다봐야 하므로 자칫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월 1회 이상 방문으로 간단히 취급했다가는 여론이 들끓을 수 있기에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에 완성도를 높이는 치밀한 방안과 목적 아래 운영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2 11 09 ()
/ 21

잇단 대형 공연, 안전대책 만전을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필요... 겨울축제 대비도

이태원 참사에도 기간 이후 도내에서 대규모 공연이 잇따라 열립니다. 관객 규모가 최고 3000명에 달해, 주최 측과 관련기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사고 이후 개최되는 대형 콘서트 역시 경찰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연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은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가동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말 연초에 집중될 겨울 축제 안전 계획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콘서트의 특징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리는 대형 공연이라는 데 있습니다. 12일 강릉에서 열리는 가수 나훈아 콘서트에는 3000명 가량이, 26일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가수 폴 김의 콘서트는 약 1000여 명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처럼 열리는 대규모 공연에 팬들의 열정적인 반응이 예상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가 열리는 강릉 아이스아레나의 경우, 정식 공연장이 아니라 빙상장 건물에 공연장을 임시 가설한 무대여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는 대규모 관중 집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회의를 갖는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춘천 백령아

트센터는 1000여명 이상이 몰릴 수 있는 상황에 맞춰 기존 안전 매뉴얼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건물과 공연의 성격을 면밀히 파악한 맞춤형 경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행사 안전을 주도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부분적으로 안전 수칙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점검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만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공연장에 입장하는 관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진출입시 교통흐름과 주차 상황을 미리 확인해 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대와 관객석의 시설 안전을 점검하는 한편, 긴급 상황에 대비한 소방 당국과의 대응 시스템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들 콘서트에 대비한 안전 대책은, 일회성에 머무르지 않는 중요한 경험일 것입니다. 같은 규모의 공연과 행사를 치를 때 활용할 수 있는 사고 예방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3년여 만에 열릴 화천 산천어축제 등 겨울 축제의 안전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이들 축제에는 하루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江原日報

2022 11 09 ()
/ 19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지역에 존치돼야 한다

지역 정치계가 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공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출장소 폐쇄 재추진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송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지역출장소 문제는 이미 2019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됐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폐쇄를 논하고 있다”며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중견·수출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이 취약한 강원도에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주민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 원활한 수출 상담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고, 수출동향 파악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존치돼야 한다. 시대 환경에 따라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직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자칫 실익 없는 개편으로 전락해 지역의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낭비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개편은 가급적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가하면 정부 조직은 이에 부응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강원도 수출액은 2021년 기준 2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

늘었고, 같은 기간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금융지원도 44%나 증가했을 정도로 수출입은행 출장소에 대한 지역 수요가 큰 상황이다. 이런 때에 원주출장소 폐쇄 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단견이다. 오히려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는 규모를 확대해야 할 판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정부 조직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를 수행하는 도구다.

따라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는 가장 기본이 돼야 할 첫 번째 원칙은 헌법이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입은행 원주

지역 정치계, 폐쇄 계획에 강력 반발 ‘파문’

송기헌 국회의원,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정부 조직개편, 미래 수요·지역 사정 반영해야

출장소 폐쇄 계획은 헌법 원칙에 부합되는가.

송 의원이 “원주출장소의 경우 도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폐쇄 시 도내 기업들은 경기 수원출장소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출입은행 원주출장소 폐쇄 계획은 지역의 수출을 크게 약화시키며 국가 균형발전엔 역행하는 처사다. 정부의 조직개편 작업이 지역 경제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개편의 초점은 주민의 삶과 공동체 미래에 맞춰져야 한다. 즉, 정부 조직개편은 미래의 수요 및 역할과 지역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江原日報

2022 11 09 ()
/ 19

국립춘천병원 사실상 운영 중단, 대책을 세워야

국립춘천병원은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하며 재활과 사회 복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원도 내 유일한 공공 정신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의료진 부족으로 사실상 운영 중단으로 내몰리면서 환자 30여명이 모두 퇴원조치됐다. 이 중에는 가족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입원한 ‘행정입원’ 환자도 있지만 추가 치료 연계 없이 병원을 나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꾸준한 치료와 재활, 지역사회 연계가 중요하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치료가 중단됐다.

국립춘천병원 정상 가동을 위해서는 먼저 의료진 공백이 해소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전임 원장의 재임용을 취소하고 올 신입 원장 공고를 올렸으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전문의 지원자는 아직까지 없다. 또 10월 말에는 국립춘천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1명이 추가로 이직하면서 병원에는 7일 현재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신과 의사와 ‘2차 진단’ 담당 의사 2명만이 근무 중이지만 1명은 최근 타 국립정신병원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이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의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 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은 오랫동안 쌓여 온 질환의 특성과 환청·환각, 생활습관 등 때문에 일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도저히 치료적 개선을 보거나 사회 복귀 재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의료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돼야 겨우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증 정신질환자는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우울증, 조울증, 강박장애, 정신분열증, 알코올 중독 등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환자와 가족 스스로가 일생을 힘들고 고독하게 보내야 하는 고통을 함께 겪어야 한다. 특히 지역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는 경제적 활동이 쉽지 않고 가정 또한 경제여력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 환자나 가족들은 치료나 입원을 하고 싶어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립춘천병원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운영난에 시달려 왔다. 시설이 낙후돼 있고 의료진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말 그대로 환자를 격리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초 취지에 맞게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유출의 원인과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 인력의 보수체계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고 전문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국립춘천병원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운영난에 시달려 왔다. 시설이 낙후돼 있고 의료진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말 그대로 환자를 격리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초 취지에 맞게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조직 진단을 통해 인력 유출의 원인과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료 인력의 보수체계도 점검해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고 전문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